

이덕일의 '역사의 창'



죽은 친일파, 산 친일파

친일 정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필자는 줄곧 죽은 친일파보다 산 친일파가 문제라고 밝혀 왔다. 대표적인 산 친일파가 식민사학자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조선총독부 역사관으로 가득 찬 교과서를 우리 2세들에게 강요한다. 문제는 이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더 득세했다는 점이다. 필자는 2년 전 광복절을 맞아 이 난에 개재한 '광복 73년, 분단 73년'이라는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식민사학이야말로 남한 사회의 가장 오랜 적폐인데, 촛불로 탄생했다는 새 정권 출범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식민사학 적폐 청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새 정권 들어서 거꾸로 식민사학이 세 세상이란 듯 더욱 기승을 부린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의 말을 '역사를 잊은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로 바꾸어두고 정확하게 들어맞음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보여 주었다.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경제 문제와 함께 식민사학 적폐 청산 여부다. 경제 문제 해결

은 난제지만 식민사학 적폐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청산할 수 있는 문제다."(광주일보 2018년 8월 16일자) 문 정권은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청산'할 수 있는 이 길에 나서기는커녕 거꾸로 식민사학자들에게 칼을 주어 지난 3년 넘게 민족사학 청산에 나섰다. 그 추운 겨울밤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웠던 지인들이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묻는 지는 오래되었다. 박근혜 정권 못지않은 권력의 사유화가 역사 관련 국책기관을 휩쓸었고, 국민 세금이 중국 동북공정과 일본 극우파 역사 왜곡 동조에 쓰였다. 문정권 내 식민사학자들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때 친일파들이 되레 정권을 잡아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이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수많은 예 중에서 김병기 현 광복회 학술원장과 관련된 사례 하나만 들어 보자.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기도 한 김병기 원장은 임정 학무국장(현 교육부장관)이자 참의부 참의장이었던 희산 김승학 선생의 증손이다. 김승

학 선생은 상해 독립신문 사장 시절 백암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韓國通史)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脈)의 집필을 도왔다. 그때 두 선생은 "다음에는 '한국독립사'라는 나라를 찾는 웃음의 역사를 편찬하자고 굳은 맹약"을 했다. 김승학은 1929년 11월 만주에서 왜경(倭警)에 체포되었는데, "팔다리가 부러지는 십 수차례 악형을 당한 것이 주로 이 사료 수집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승학은 이렇게 목숨 걸고 간직한 사료들과 생존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를 엮어서 1965년 '한국독립사'를 출간했다.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쓴 독립운동사인 '한국독립사'는 내용이 방대한 데다 국한문 혼용이었고 품질면 지 오래였다. 그래서 5년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김승학 선생의 자료를 기증받는 대신에 '한국독립사' 해제 및 재간행 사업을 5년간 수행해 국민 누구나 독립운동사를 쉽게 접하게 하라는 것인데, 문 정권이 임명한 안병욱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강제로 중단시켰다.

반면 한국학중앙연구원 내 뉴라이트 계열 교수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사업은 구제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병기 원장의 '이병도·신석호는 해방 후 어떻게 한국사학계를 장악하였는가'라는 저서는 한중연과 교육부로부터 출간 금지 조치와 함께 연구비 일부 환수 조치를 당했다. 3대 독립운동가 후손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병도·신석호의 행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간 한중연과 교육부로부터 당한 압박과 모욕은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금해한다. 문 정권 들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한 역사 관련 국책 기구들과 교육부 내의 친일 세력들이 더욱 준동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 반하는 것이라면 왜 이를 방치하는 것인지? 이제 문 정권에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 문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 시민들의 눈으로 식민사학 문제를 바라보면 길은 환히 보인다. 물론 이 정권이 이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의료칼럼

슬기로운 여름나기



신준혁 수완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하는 신체 이상을 말한다. 노년층의 경우 노화 때문에 땀샘이 감소해 땀 배출량이 줄어들어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므로, 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열사병이 의심될 때 할 수 있는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먼저 서늘하고 그늘진 장소로 환자를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 또 이온 음료 등으로 체내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게 하고 셔츠나 벨트 등 몸을 꼭 조이는 옷들을 풀어 준다. 젖은 수건 등으로 환자의 몸을 감싸 열을 떨어뜨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바람을 쐬거나 찬 것을 많이 먹은 뒤 속이 차가워져서 나타나는 여러 질병을 음서(陰暑)라고 한다. 음서(陰暑)는 현대의 냉방병과 가장 유사한데, 실제로 여름 질병은 더위로 인한 것보다는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이 가장 많은 편이다. 고온다습한 날씨와 폭염으로 실외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실내의 냉방기기에 오래 노출돼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에 적

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전신적인 생리 기능 장애를 초래해 몸 곳곳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냉방병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은 한 시간 이상 냉방기기를 사용하면 복통, 설사와 같은 위장 장애가 생겼거나 감기에 걸린 것처럼 콧물이 흐르거나 두통이 생겼다면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원인 모를 신경통이나 요통이 생길 수도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여름철 중요한 양생법(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땀을 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여름이라고 무작정 시원하게만 지낼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의 열기를 탐구명을 통해 외부로 배출함으로써 바깥 온도와 체내 온도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여름철 건강 유지에 좋다는 뜻이다.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냉방기기에 대한 노출 시간을 줄이고 그늘이나 자연 바람을 이용하도록 한다. 폭염으로 인해 부득이 냉방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섭씨 5-8도 내외로 유지하도록 하고, 한 시간 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제내경'과 '동의보감'에서는 '열은 기를 상하게 하므로 기(氣)가 약한 사람은 더위에 상하기 쉽고, 여름은 신장이 쇠약해지는 시기이므로 진액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더위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더위에 약한 노인이나 아이들은 여름철에 피로해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여름을 나는 방법이다. 여름철 명약으로 손꼽히는 '충명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 등으로 정성스럽게 빚어낸 약이다. 녹용은 양기를 돕고 혈액과 정수를 보하며 근골을 강화시켜 오장육부의 허로를 보하여 피로 회복에 탁월하다. 당귀는 혈액의 생성을 도와주고 혈액을 맑게 해 혈액 순환을 증진, 성질이 따뜻해 여성에게 특히 좋다. 산수유는 부족한 정액을 보하여 간, 신장의 기능을 항진시킨다. 사향은 몸의 막힌 기혈 순환을 촉진시키며 정신을 맑게 하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켜 주며 심장을 강화한다. 하지만 몸에 좋다고 무턱대고 섭취하는 것보다는 명사에게 상담을 통해 자신에 맞는 약을 선택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社說

'코로나 확산' 그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우리가 현실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다. 교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19일 낮 12시 기준)는 623명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588명, 비수도권 35명이다. 두 달 가까운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불볕더위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더욱 힘들어졌다. 광우·전남 역시 초비상 상태이다.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진도군의 경우 60대 주민 한 명이 감염됐다.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내에서 경기도 김포시 확진자에게 전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주민은 확진자 통보를 받을 때까지 이미 7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이번 코로나 확산은 다양한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에 참가했던 무등상·경중 감염자를 중심으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일어날 경우 자칫 의료 체계 붕괴와 통제 불능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그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 경북공 인근 집회(8일)와 광화문 집회(15일) 참가자들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민들도 느슨해진 경각심을 다잡고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서 배려하는 일이다.

"너무 늦었다" 5·18 묘역에 무릎 꿇은 김종인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 벌써 일백 번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를 방문,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거 당의 태도와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대해 사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주 도착 직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낭독했다. 그의 사과는 자기반성으로 시작했다. 자신이 과거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재무부와 위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임이 빠진 광주 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18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이 쏟아 낸 막말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광

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한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추모탑에 헌화한 뒤 15초가량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5·18 민주화운동 40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정당 대표가 오일 영령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춘 진정한 사죄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김 위원장의 사죄는 당의 불모지인 호남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의 하나이겠지만 그동안 보수 정당이 보여 준 모습에서 진일보한 것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으로부터 진정한 광주 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5·18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이 쏟아 낸 막말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광

기 고

'사회 안전망'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안수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은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 지원금 20%) 부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는 급여 비용 선 지급을 실시함으로써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높으면 구매력 감소와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7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함으로써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안전망 역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건전한 재정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2020년-2021년 3.2%, 2022년 3.4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를 3.2% 인상할 경우 직장 가입자는 본

인 부담이 평균 11만 4568원에서 11만 8292원으로 월 3724원,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평균 9만 5946원에서 9만 9031원으로 월 3085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실제로 2018년 3대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 전액 폐지,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적용 병상 확대는 물론 MRI,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금 인하 등으로 중증 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에 달하여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 주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또한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전정련에

서 조사한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이 80%에 달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와 건강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국민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 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온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과 경제 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서 병원비만족은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해 공단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불어 함께 할 '평생 건강의 든든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無等鼓

'호남' (湖南)이라는 명칭이 공식 기록에 등장한 것은 13세기 중엽부터다. 1018년(고려 현종 시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전라도'라는 지명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불분명하다. 영남·관서·관동의 명칭도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모두 2873회(2243건의 기사) 언급되는데, 유럽이나 명승지 소개 등에 주로 쓰였다. 주요 농수산물의 산지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호남의 중요성은 조선 을 침탈한 세계 열강들 도 잘 알고 있었다. 1896년 프랑스 휘브릴 사가 서울~목포 간 경 관 및 영남권 중심의 개발과 성장, 호남 권의 소외와 낙후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국가와 민자의 집중투자로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수도권으로 사람·물자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그 부작용이 이슈로 부상하자 이번에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혜택을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 가장 먼 호남은 또한 번 설움과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호남의 인구는 반토막이 났고, 쇠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 지 국가 균형 발전은 기 쯤 불균형에 대한 시정 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기계적으로, 오로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다. 19세기 말 호남선 건설의 좌초, 그리고 일제에 의한 경부선 개통과 함께 110여 년간 이어진 호남의 쇠락은 효율과 성장을 우선한 과거 정부의 불균형 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묵묵히 이를 간내해 온 호남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호남과 균형발전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광)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